

‘금투세 2년 유예’ 논란 점화... 野 “부자 감세, 도입 강행”

정부, 시장 회복 위해 유예하기로 민주당 “금투세 실제 부과 대상 수익 상위 극소수 불과” 정책 지적 은행·증권 물론 투자자 혼란 가중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시기를 두고 정부와 야당의 의견차가 좁혀질 줄임이 없는 모습이다. 정부의 ‘금투세 도입 2년 유예안’에 대해 야당이 ‘부자 감세’라고 제동을 걸며 첨예한 공방이 이뤄지고 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소득에 매기는 세금이다.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금융투자주주 주식 5000만원, 기타 250만원 등 일정 금액의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0% (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매기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당초 2023년 1월 1일 도입 예정이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정부는 시행 시점을 2년 연기하겠다고 발표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금투세 도입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내년도 예산안 확정에 맞춰 세법개정안 심사가 이뤄져야 하지만, 아직 조세소위원회조차 구성하지 못하는 등 여전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금



김성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1

투세 유예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고광호 기재부 예산실장은 “당초 (금투세를) 도입하려던 2020년과 상황이 많이 변했다”며 “주식시장이 30% 이상 폭락한 상황에서 시장 회복이 더욱 지연되고, 자본 유출이 가속화될 우려가 있다. 투자 환경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한 후 도입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금투세를 실제로 부과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해 유예는 ‘부자 감세’라는 것이 야당의 입장이다.

김성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투세 유예에 대해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와 붙어있

는 금융투자소득세 제도를 2년여 전 여야가 합의했고 당시 의원인던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합의해 시행하기로 했던 제도”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제도는 세수 중립적 제도”라며 “종합금융소득세 제도를 개편하는 대신, 일종의 증권거래세를 인하여 ‘개미’ 투자자가 매번 증권을 거래할 때마다 내는 세금을 금융소득만큼 낮춰줘 사실상 개미들에게도 유리하고 경제 양극화를 완화하는 데도 훨씬 더 좋은 취지의 제도”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측 논리는 금투세 대상 투자자

가 생각보다 많지 않으며 거래세를 낮춰주기 때문에 사실상 유리하다는 주장이다. 유동수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주요 5개 증권사에서 연간 수익 5000만원 초과 1억 원 미만을 거둔 투자자는 전체 투자자의 0.9% (6만 7281명)이고 수익 1억 원을 초과한 투자자도 0.7% (5만 6294명)에 그쳤다. 또 증권거래세는 현행 0.23%에서 0.20%로 인하하는 방안이다.

금투세 도입을 두달 앞둔 시점에서 여야의 시각차가 대립하자 은행, 증권사 등 판매사와 투자자들의 혼란은 가

중되고 있다. 특히 개인투자자들은 금투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내 주식 양도소득이 비과세 대상이었으나, 금투세 도입으로 인해 비과세 혜택이 없어진다는 이유다. 지난 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서 금투세 시행을 유예해달라는 청원이 동의수 5만명을 돌파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로 회부됐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는 “금투세 시행은 시기상조”라며 “주식시장 제반 환경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린 뒤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기본공제 한도관리 시스템, 원천징수 시스템 등 금투세 도입에 맞춰 전산작업을 이어오던 금투업계도 혼란을 겪고 있다는 후문이다. 은행, 증권사 등 판매사들은 당초 제도 도입 시기인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시스템 구축을 준비하고 있었다.

증권사 관계자는 “시스템 구축에만 수십억원이 쓰이는데, 유예인시행인 지조차 확실하지 않아 내부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태”라며 “금투세 도입에 따른 절세 포트폴리오, 상품 설계 등이 모두 달라지는데 답답할 따름”이라고 토로했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최우선 문제는 ‘인재’, 맞춤형 지원도 절실

>> 1면 ‘K-반도체를 지켜라’서 계속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공급이 쪼그라들면서 글로벌 자동차 업계 실적이 급감했던 것. 국내에 생산 기지가 거의 없던 탓에 국내 완성차 업체들도 대처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나마 시스템 반도체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기반 산업, 파운드리 부문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재용 회장이 ‘반도체 비전2030’을 발표한 후 경쟁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성공하면서다.

파운드리 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 1000억달러 (한화 약 138조원) 수준이었다. IC인사이드 등 업계 관계자들은 2025년에는 1500억달러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삼성전자 점유율은 16% 수준이다. 다만 TSMC가 50% 안팎으로 3배에 가까운 차이가 있지만, 10나노 미만 선단 공정 시장으로만 한정하면 점유율은 40대 60 정도로 추정된다.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부문에서 유일하게 3나노를 양산하고 있다. TSMC도 올 하반기 양산하겠다고 밝혔지만 결국 기술 문제로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7년에는 1.4나노 공정을 도입하는 등 ‘초격차’를 확대하며 점유율을 끌어올린다는 전략이다.

삼성전자는 이를 기반으로 고성능 제품 시장까지 점유율을 끌어올리겠다는 포부다. 당장 이미지센서 시장에서는 점유율을 점유율 30%로 끌어올리며 압도적인 1위였던 소니(44%)와 격차를 좁혀가고 있다. 2억화소 제품을 출시

하면서 여전히 6400만화소 제품을 주력으로 하는 소니보다 기술적으로는 한발 앞섰다는 평가다.

SK하이닉스도 합세했다. 자회사인 시스템아이씨에 이어 과거 분사했던 ‘키파운드리’를 다시 인수하면서 파운드리 역량을 대폭 높였다. 청주에도 파운드리 라인을 확충하는 등 생산능력을 대폭 끌어올리는 것은 물론 최근 1억화소대 이미지센서까지 공개하면서 사업 다양성까지 확보하는 모습이다.

문제는 설계다. 엑시노스 시리즈가 국내에서는 유일한 고성능 AP지만, 좀처럼 성능을 높이지 못한 탓에 점유율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차세대 플래그십 스마트폰인 갤럭시S23에도 퀄컴 스냅드래곤을 전면 도입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팹리스 산업은 더 심각하다. 글로벌 점유율이 1%에 불과하다. 전세계 50개 기업에서도 LX세미콘이 유일하다. 그나마도 주력분야가 디스플레이 DDI를 비롯한 비주류 제품에 머물러 있어 경쟁력을 끌어올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인재 부족이 가장 큰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반도체 양산에 치중된 인재 육성 구조 탓에 설계 인력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

맞춤형 지원 정책도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AI와 AP, NPU 등 고성능 칩뿐 아니라 DDI와 전장 반도체 등 다양한 분야가 서로 다르게 발전하는 만큼, 각각 상황에 맞는 육성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재웅 기자 juk@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수립을 위한 토론회

토론회 주제

지속 가능한 중대재해 예방 체계

LIVE 유튜브 생중계(채널: 고용노동부)

*자유롭게 현장 참여도 가능합니다.



일시 2022.11.10 (목) 14:00~17:00
장소 로얄호텔서울 2층 로얄볼룸

1부 인사말씀 권기섭 | 고용노동부 차관

2부 발제

- 1. 로벤스 보고서의 함의 - 자율규제를 중심으로
전형배 |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2. 산업안전보건법·정책 혁신방안
정진우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

3부 패널토론-질의응답

좌장: 강성규 | 가천대 보건대학원장
경사노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

- 오순영 | 동덕여대 인간-시스템디자인공학전공 교수
- 김재형 | 숭실대 스마트산업안전공학과 교수
- 김동하 | 코카콜라 안전보건경영파트 리더
- 최명선 |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 이득호 | 한국노총 전국산업안전노동조합 사무국장
- 양옥석 |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 직무대행

